



“오철호 이사장은 연합뉴스에 관심이나 있는가” 연합뉴스사원 93% “뉴스통신진흥회 불신”

박정찬 사장이 지난해 말 오철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잔뜩 움츠린 채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히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대표이사 등 임원의 추천권한이 있는 최대주주임에도 사의표명 2주가 지났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오철호 이사장의 무책임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오 이사장은 박 사장의 사의 표명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심지어 다른 6명의 이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는 애초 이번 주에 예정됐던 노조와 약속도 “노조와 만난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연합뉴스야 어떻게 되든지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회사에서 마음이 떠난 박 사장과 무책임한 뉴스통신진흥회, 아무런 대책없이 두달도 더 남은 3월 말 정기주주총회만 기다리자는 연합뉴스 이사진.

만만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해도 하루하루가 모자랄 연합뉴스는 이 ‘3중 쓰나미’에 휩쓸려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사실상 경영진 공백으로 빚어진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합뉴스 이사진(성기준·장익상 이사)에 뉴스통신진흥법에 규정된 직무대행을 하루 빨리 의결하든지, 뉴스통신진흥회에 차기 경영진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뉴스통신진흥법(15조)은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임원의 직무로 규정한다.

노조는 11일 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14일 오전공문을 통해 노조 대표단과 이사진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 사장의 사의 표명 뒤 오철호 이사장이 일관하는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사내 구성원의 불신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7~11일 일주일간 했던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한 전사원 설문조사’(응답률 72.6%)에서 응답자의 92.5%가 “뉴스통신 진흥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답했다.

사원의 절대다수는 뉴스통신진흥법엔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진흥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한 이유론 ▲정치권의 외압에 순치돼 박 사장의 연임강행에 일조했다(70.8%)는 것과 ▲연합뉴스의 공정보도 기반을 약화시켰다(34.8%)는 대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 목적과는 정반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사원들은 이처럼 제 할 일을 못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개선방향으로 ▲진흥회 이사진 추천 주체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51.2%) ▲진흥회 이사진 개편으로 독립성·전문성강화(46.6%)를 요구했다.

3년 임기의 진흥회 이사진은 대통령(2명), 여당(2명), 야당(1명), 신문협회·방송협회(각 1명)가 추천 주체다.

이사진 추천주체 변경과 아울러 사원의 절반 가까이 현이사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대답한 것은 박 사장의 연임에 동조한 이사진에 대한 불신이 폭발했다고 풀이된다.

고일환 노조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진흥회와 경영진이 대행 체제나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경영 공백 상황에 대해 배임하는 것과 같다”며 “이사회와 진흥회가 움직이지



오철호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않는다면 이들을 상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성원 절대 다수의 불신을 사고, 회사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않는 오철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은 이번 전사원 설문조사 결과에 조속히 응대해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오철호 이사장은 누구

이명박 대통령, 박성찬 사장과 같은 고려대(사학과)를 졸업했다. 1946년생으로 박 사장보다 8살 많다. 박 사장과 합동통신 선후배 관계며 연합뉴스의 전신인 연합통신의 정치부장(1991), 편집국장(1997), 총무·출판담당 상무(1998~2000)를 지내고 퇴사했다.

2002년 대선 국면에서 정몽준 후보 캠프의 정무특보를 지내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폴리널리스트’다.

이 때문에 2008년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로 임명됐을 때 연합뉴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진흥회의 설립목적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1년 12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직을 연임하면서 이사장에 선임됐다.

그는 지난해 3월 파업시 노조 대표단과 면담에서 무책임한 임원 추천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임원(상무이사) 후보였던 박노황 상무와 장익상 기획조정실장 가운데 박 상무를 편집상무로 추천한 데 대해 노조가 이유를 물었다.

박 상무는 편집국장 시절 불공정·편파 보도의 책임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에 오 이사장은 “한 사람(박)은 현재 임원이어서 임원이 안되면 집에 가야하고, 다른 한 사람(장)은 임원 선임이 안돼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동정표가 작용했다”고 답했다.

뉴스통신진흥회가 회사 경영진을 추천하면서 능력이나 업무 적합성 대신 개인적인 사정을 우선했고 오 이사장은 진흥회의 이사장으로서 이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셈이다.

이후 박노황 상무는 파업이 계속되자 상무직을 바로 사임했다.

당시 사측 관계자는 노조에 “박 사장이 파업을 해결하려고 박 상무를 어렵게 설득해 과감히 결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상무는 이후 연합뉴스의 자회사인 연합인포맥스의 대표이사로 부활했다.

박 상무의 사임이 연합뉴스 사원들의 분노를 면피하기 위한 ‘위장 사임’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설문결과

연합뉴스 사원 93% “뉴스통신진흥회 제역할 못해”

1월 7일부터 11일까지한주간진행한 「연합뉴스의미래를위한전사원설문조사」에참여해주신사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집계결과연합뉴스사원 807명(휴직자.연수자포함) 가운데 586명(72.6%)이참여해주셨습니다. 통상전사원대상설문조사는휴직자와연수자는제외하는데, 이번 조사에선이들은물론외국인에디터일부까지의견을주셨습니다.

뜨거운관심에감사드립니다.

이번설문조사결과는노조만의뜻이아닌회사의미래를진심으로걱정하는연합뉴스가족모두의염원이라고할수있습니다.

노조는이번에나타난연합뉴스의총의를방향타로삼아전사원과손을잡고힘차게전진하겠습니다.

(※각항목의백분율은참여자 586명에대한답변비율입니다. 복수응답이므로문항별합계가 100%가넘습니다.)

1.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새정부가 들어서는 등 회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바로 서기 위해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무엇인가요.

- ① 공정보도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70.2% (410명)
- ② 비전과 균형감을 갖춘 새 경영진 구성 55.0% (321명)
- ③ 건전한 재정구조 19.2% (112명)
- ④ 통신과 방송의 선순환 14.6% (85명)
- ⑤ 노사의 협력 15.2% (89명)
- ⑥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27.4% (160명)

2. 새 경영진(사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 ①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 57.7% (337명)
- ② 사내 구성원과 소통능력 50.9% (297명)
- ③ 상식적으로 투명한 인사 29.8% (174명)
- ④ 재정 안정을 위한 경영능력 34.8% (203명)
- ⑤ 정치적.경제적 외압에 대한 대처능력 25.9% (151명)

3. 차기 경영진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공정보도 전통 확립 48.0% (280명)
- ② 재정 안전성 강화 27.6% (161명)
- ③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 35.0% (204명)
- ④ 핵심역량 훼손없는 뉴스와이와 상생 16.6% (97명)
- ⑤ 사내 불신과 갈등 해소 52.2% (305명)

4.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 목적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뉴스통신진흥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간 뉴스통신진흥회가 이런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합니까.

- ①예 5.7% (33명)
- ②아니오 92.5% (540명)

4-1.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연합뉴스의 공정보도에 기여 1.5% (9명)
- ② 연합뉴스 재정안정에 기여 2.9% (17명)
- ③ 정치권의 외압에 대한 보호막 역할 1.4% (8명)
- ④ 연합뉴스 경영 감독 역할 충실 1.2% (7명)

4-2.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연합뉴스의 공정보도 기반 약화 34.8% (203명)
- ② 연합뉴스 재정안정 약화 5.0% (29명)
- ③ 정치권 외압에 순치(박정찬 사장 연임 강행에 일조) 70.7% (413명)
- ④ 연합뉴스 경영감독 역할 부실 19.4% (113명)

5. 뉴스통신진흥회의 개선 방향은.

- ① 진흥회 이사진 개편으로 독립성, 전문성 강화 46.6% (272명)
- ② 진흥회 이사진 확대로 공공성 강화 19.5% (114명)
- ③ 사장추천 과정의 권한 개선 21.4% (125명)
- ④ 진흥회 이사진 추천 주체 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 51.2% (299명)

[성명] 뉴스통신진흥회는 무위도식을 중단하라

지난해 말 박정찬 사장이 오철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연합뉴스의최대주주이자경영을감독하는기관이다.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사의를 밝혔다면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 공백을 막도록신속한조치를취해야한다.

그러나 오 이사장은 2주일 넘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뉴스통신진흥회이사회에박사장의사의표명사실을보고했는지도분명치않다.

회사 주변에선 오 이사장은 박 사장이 회사를 나가면 역시 임기를 2년 남겨놓은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돌고있다.

오 이사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단순한 무능 탓이라는 해석과, 정권교체에 본인도 전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지 않고 자리를 보전하려는알뜰한계산탓이라는해석중어느것이맞는지확실치않다.

문제는 오 이사장이 좌고우면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연합뉴스는 지휘부

공백위기에표류하고있다는점이다.

1월11일 완료된 `연합뉴스의 미래를 위한 전사원 설문조사'에서 연합뉴스 사원 93%가"뉴스통신진흥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상황을반영한것이다.

오이사장은무위도식을중단해야한다.

한시라도 빨리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에서 마음이 떠난 박 사장을 대신할 새대표이사를추천해야한다.

연합뉴스 사원 절대 다수를 대표하는 노조는 뉴스통신진흥회와 머리를 맞대고회사의위기탈출방안을논의할용의가있다.

오 이사장이 앞으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노조가 직접 연합뉴스를 위기에서탈출시키기위한행동에나설것이다.

노조의 행동에는 당연히 오 이사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도 포함될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